

# 공교육 멈춤의 날 주도 교사 처벌 말라

지난 9월 한 보수단체가 서울의 초등학교 최 아무개 교사를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최 교사가 “인터넷에 ‘공교육 멈춤의 날’ 관련 의견을 올리고 집단연가 및 집단행위를 추진”한 것을 문제 삼았다. 교사들을 괴롭혀 온 ‘악성 민원’의 끝판왕을 보는 듯하다.

보수 단체의 고발 의도는 명백하다. 교사 운동에 대한 탄압의 물꼬를 트고 교사 운동을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분출한 교사 운동은 최대 30만 명이 참가한 집회로 이어졌고, 9월 4일에는 ‘연가 파업’을 성사시켜 사상 유례없는 ‘공교육 멈춤의 날’을 만들었다.

정부와 보수 단체가 유독 ‘공교육 멈춤의 날’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그만큼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이다. 대규모로 분출한 교사 운동은 교사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투쟁에 대한 자신감과 영감을 준 사건이었다.

파면, 해임 운운하며 협박하던 정부는 결국 한 발 물러서 징계를 철회했고, 국회는 부랴부랴 ‘교권보호 4법’을 통과시켰다.

보수단체의 고발에도 교사들은 위축되기는커녕 투쟁을 지속하고 있다. 해당 교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처음 고발당한 사실을 확인 후 당혹감이 가장 컸지만 ... 옳은 일이라고 생각해



진행했으며, 후회는 없다”고 당당히 소신을 밝혔다.

10월 20일 국정감사 질의응답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고발당한 교사가 불이익이나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조 교육감은 실제 교육감 권한을 사용해 해당 교사를 방어해야 한다.

한편, ‘교권보호 4법’ 통과 후에도 교

권을 보장하고 교육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력 확충과 예산 투입 등이 없어 교사들의 불만은 여전하다. 오히려 정부는 올해 유·초·중등교육 예산을 무려 7조 원 넘게 삭감하고, 교사 정원을 2500명이나 감축해 상당수 지역에서 학교당 교사 1~2명씩을 줄이고 있는 상황이다.

당장은 보수단체가 고발하는 모양새

이지만 정부가 이를 이용해 탄압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이다. 실제 2014년 세월호 교사 선언도 보수단체가 고발해 수사가 진행됐고, 많은 교사들이 고충을 겪은 바 있다. 교사 운동은 최 교사를 적극 방어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해 교사들의 단체행동을 가로막는 악법을 바꿔야 한다.

독자·지지자들의 구독료와 후원으로 발행하는 좌파 주간 신문

## 노동자연대 정기구독/후원하세요

정기구독료: 연 50,000원

입금 계좌 (예금주 ☞ 레프트미디어)  
국민은행 020601-04-080896, 농협 301-0010-1643-71  
※ 웹사이트에서 신용카드·핸드폰 결제 가능



구독 문의  
02-777-2792  
ws@wspaper.org

wspaper.org



〈노동자 연대〉정규호에는

16면 전면에  
중동 소식과 분석,  
팔레스타인 현지인의  
목소리,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 내 쟁점이  
실려 있습니다.

☐ 아침에 읽는 <노동자 연대> 구독하세요! 매일 아침 7시 30분 이메일로 기사를 배송해 드립니다.



# 인력·예산 대거 감축하면서 “교육활동 보호?”

9월 21일 ‘교권보호 4법’이 통과됐고, 9월 1일부터 교육부의 학생 생활지도 고시안이 시행됐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하는 교사들은 별로 없다.

윤석열 정부는 말로는 안전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위기 행동 학생을 분리할 수 있는 공간 마련과 분리 학생을 지도할 인력 등은 모두 개별 학교에 떠넘겼다. 정부가 내놓은 인적·재정적 대책은 전혀 없었다.

오히려 교육 예산을 대폭 삭감해, 관련 인력 확충과 공간 마련 등 교권 보호 조처 시행은 더 요원해지고 있다.

정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이유로 올해 초·중등교사 교사 정원을 3201명 줄인 데 이어, 내년에 다시 2500명을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 수는 줄고 있지만 학급 수는 큰 변동이 없어 전체 업무량은 줄지 않았다. 결국 감축된 교원 정원에 맞춰 교사 수를 줄이면 교사의 업무 부담은 더 늘어나는 것이다.

〈교육희망〉의 보도를 보면, 인천 지역은 “내년 학급 수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교과 시수를 조절해 학교별 1~3명을 줄이라는 교육청 지침이 내려 왔다.” 충남 교육청도 ‘6학급 이상 학교는 일률적으로 교사 1명 감축 지침’을 내렸고, 서울 지역도 학교당 교사 1명씩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대구에서는 중학교 141학급, 고등학교 62학급을 감축하면서, 학교별로 교사도 1~4명 줄여야 한다.

교권 보호를 위한 교사 충원은커녕 감축된 인원으로 동일한 업무량을 처리해야 해, 교사들의 고통이 줄어들 수가 없는 것이다.

농어촌과 구도심의 소규모 학교는 교사 부족으로 이미 정상적인 교육이 어려울 지경이다. 그런데 교사 정원이 추가로 감축되고 있으니 상치·순환 교사는 더 늘어나게 되고, 소규모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의 업무 부담은 더욱



커지게 생겼다.

게다가 정부는 그동안 부족한 교사 정원을 메우려고 한시적 기간제 교사를 대규모로 채용해 왔는데, 내년에는 교육 예산 부족을 이유로 한시적 기간제 교사 정원마저 줄이겠다고 한다.

## 노동강도

기존 업무는 줄어들지 않는데, 사교육비 경감 대책, 학생 개인 맞춤형 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등 해마다 새로운 업무가 더해지고 있으니 결국 남은 교사들이 노동강도를 높여 더 많은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

고등학교에서는 었친 데 덮친 격으로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담당 과목 수까지 늘어나는 형국이다.

현장의 많은 교사들은 수업·생활지도·상담·평가 등을 충실하게 하려면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 이하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지난해 전체 초·중고 학급 중 21명 이상 과밀학급이 75퍼센트나 됐다. 26명 이상인 학급도 초·중 27퍼센트, 중학교 59퍼센트, 고등학교 37퍼센트나 됐다(교육통계연보).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학생 수 감소를 교육 환경 개선의 기회로 삼기보다는 교육 예산을 삭감할 방안으로 여기고 있다.

더구나 정부는 긴축 재정과 세수 감소를 이유로 올해 교육청 교부금을 대폭 삭감했다. 올해 지방교육교부금 예상액은 75조 7000억 원이었지만 실제 지급액은 65조 원으로, 무려 11조 원이나 줄었다. 올해 국세수입이 59조 1000억 원

이 감소한다며 말이다. 이미 내년 교부금도 7조 원가량 줄인다고 한다.

정부는 초·중등 예산을 떼어내 대학에 지원하겠다고 한 데 이어, 삭감된 교육 예산으로 유보통합을 위한 어린이집 지원도 하라고 한다.

이런 식이면 ‘공교육 정상화’나 교권 보호는 고사하고 기존의 초·중등 교육 운영마저 어려워지고 교육 환경은 더욱 나빠질 공산이 크다.

교권을 보호하고, 교사들의 부담을 줄이는 유일한 길은 교사와 행정 인력 등을 늘리는 것밖에 없다.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교사의 업무 감축, 상담·특수 교사 증원 등 교사 처우 개선과 전반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인력과 재정 지원이 없다면 정부의 ‘교육활동 보호’ 구호는 공염불에 그칠 수밖에 없다.

노동자연대 단체에서 가입을 받습니다



위기의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대안을 제안하는

**노동자연대** 가입하세요

workerssolidarity.org/join

문의: 02-2271-2395



**노동자연대 기본입장**

workerssolidarity.org/what-we-stand-for



youtube.com/c/노동자연대TV

마르크스주의 관점으로 당신의 눈을 여는 채널

**노동자연대 TV**

☆ 구독  
♡ 좋아요  
🔔 알림설정



- 온라인 토론회 방송
- 시사/이슈 팩트부터 논쟁점까지
-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10부작
- 현대 중국의 모든 것 12강

지금 구독하세요! 온라인 토론회 등 이벤트 일정과 새 콘텐츠 소식을 보내 드립니다.